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38호 / 2026년 09월 08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정몽원 회장, 어디까지 관여했나 - “모든 것”을 보고 받았지만, “책임”은 아래로 미루나

최근 언론에 두 가지 기사가 보도되었다. 하나는, 중대재해 이후 노동조합 몰래 외주업체를 조립 생산하고 기아자동차에 납품한 문제다. 또 다른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원 회장 자녀의 사모펀드에 HL홀딩스의 자금 2,170억원이 흘러간 정황을 조사했지만, 8개월이 넘도록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내용이다.

공장 멈춘 HL만도, 셀토스 제동부품 외주 논란...기아도 당혹
노조 "외부서 생산 납품해 변경·품질 검증 안돼"...기아 "재고·변경 내용 검토 중"

공정위, HL그룹 정몽원 일가 의혹 봐주나·못찾나... "조사착수 여덟달·승계작업은 착착" '부당지원' 의혹 조사 결과 발표 촉구

■ 무관해 보이는 두 가지 기사,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누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가, 지주회사 체제인 지배구조에서 만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아차 납품과 자녀 부당지원을 만도가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 누가 최종결정한 것인가? 이 같은 결정으로 만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언론에서는 공개된 내부 문건으로 볼 때 정몽원 회장이 매일 보고 받는, 결재 구조가 존재했다고 한다.

□ 선을 넘은 외주업체 조립 생산, 원하청 간 문제를 넘었다.

중대재해 이후 사측은 노동조합 몰래 SP3(셀토스 차량) 캘리퍼를 외주업체에서 조립 생산해 기아자동차에 납품했다. 생산처 표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기아자동차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하청간 선을 넘은 결정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공장 정상화 볼모 ... 외주 조립생산은 가능

- 사람은 줄었는데 높은 가동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었나?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각종 고소 고발과 노동부 압박, 기자회견 등은 바로잡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최근 사측은 고소 고발 남발이 우리의 일터를 흔들고, 중대재해를 볼모로 노동조합이 적정 인력을 새롭게 요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임단협 요구안으로 적정인력과 정년연장을 요구한 것은 7월 7일이다. 중대재해는 7월 22일 발생했다. 시간을 거꾸로 얘기하는 것은 사측이다.

또한 중대재해 이후 현장의 적정인력 문제와 높은 가동률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 만도 국내 공장 생산가동률은 88%다. 사람은 계속 줄고 있는데, 가동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빈자리는 채우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되고 있다. 노동강도와 적정인력의 관계를 노동조합이 들여다보는 이유다.

■ 노동조합은 이제 그럴 수 없다.

그동안 사측이 결정하면 받아들이는 노동조합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럴 수 없다. 임금을 잘 못 계산하면 소송을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외주업체에서 조립 생산이 된다면 바로 잡을 것이다. 정몽원 회장의 자녀 승계 문제도, 만도가 부실해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면 막을 것이다.

□ 가공이 나가고, 조립까지 나가면 공장만 남는다.

중대재해 이후 외주에서 조립 생산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지난 14년 동안, 가공과 조립이 외주로 빠져나가고 물량과 공정도 외주화되었다. 조합원의 일거리가 없어진 것이다. 같은 방식이 계속된다면 공장만 남게 된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 회사가 답할 차례, 누가 결정했고 누가 책임져야하나?

10년 넘게 안전조치를 미룬 것도, 노동조합 몰래 외주업체에서 생산한 것도, 성능 검사 전에 기아자동차에 납품된 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누군가 결정했고, 누군가 승인했다. 또 누군가는 보고 받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묻는다. 정몽원 회장이 어디까지 보고 받았고, 어디까지 관여를 한 것인가? 정몽원 회장이 승인했다면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자로서 권한만큼 책임져야 한다.